

지방자치실천포럼



이달의 Issue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 지방자치실천포럼

– 소통과 융합의 지방자치

: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 이슈대담

–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 김선교 양평군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통권 제68호 /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편집위원장 이창균
위원 권오철 박진경 김건위 김성주 김대욱 강영주 / 담당부서 연구기획과
연락처 T 02-3488-7361 F 02-3488-7305 / 홈페이지 www.krila.re.kr / 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 본 지방자치실천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 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실천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CONTENTS

March 2015 | vol.68

2015.03

이달의 Issue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04 지방자치실천포럼

– 소통과 융합의 지방자치

: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 포럼위원 토론 요약

14 이슈대담

–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 김선교 양평군수

21 논단

–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의 과제

– 지역행복생활권의 연계·협력 촉진에 대한 제언

31 국내외 우수사례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국내사례 : 선도사업 유형 및 특성

–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신산업화 : 유럽의 '외레순' 지역

43 지방자치단체 탐방

–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명품 도시, 울주군

49 연구원 동정



「지방자치실천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 6월 26일에 지방자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방자치실천포럼」을 창립하였다.

『지방자치실천포럼(공동대표 : 박재창 교수, 이승중 교수)』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업의 장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럼 목적

-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지방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철학의 공유 및 실천적 대안 논의
- 지방 현안과제에 대한 관-학-연간 소통 및 대안모색 기회 확대

포럼 구성

- 공동 대표 박재창(한국외대 교수), 이승중(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부(중앙, 지방)-학계-연구원 등 55인의 인원 구성
- 구성 원칙 지방자치 관련 학(행정학, 재정학, 지방자치 관련 주요 학회 및 대학, 언론 등)-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협의회)-연(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계에 의한 지방자치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중기 발전 모델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며 지역순회를 통한 국민 담론의 장으로 발전

기조연설

- 1회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자치의 과제(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 2회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전략(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 3회 국민행복시대의 지방자치(김동완 국회의원)
- 4회 다원주의적 지방거버넌스의 진화(이달곤 前 안전행정부 장관,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 5회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왜 & 어떻게(최외출 영남대학교 부총장)
- 6회 지역행복생활권과 지역발전정책(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 7회 지방자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 8회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시대를 열자(김문수 경기도지사)
- 9회 지방자치, 새로운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10회 지역발전, 환경문제 그리고 국민행복(윤성규 환경부 장관)
- 11회 '국가개조'와 지방자치(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 12회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13회 국가와 지방의 재정협력(박재완 前 기획재정부 장관)
- 14회 세계 경제와 우리의 대응(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15회 협치로 여는 제주의 미래(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16회 공무원연금개혁의 쟁점과 방향(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제17회

지방자치실천포럼

발제 및 토론 요약

〈1. 발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소통과 융합의 지방자치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안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소통과 융합으로 정했습니다.

울산은 1962년에 울주군에서 울산시로 승격되면서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약 50년 사이에 인구는 8만 명에서 119만 명으로, 공업생산액은 22억 원에서 217조 원으로, 지역 수출액은 26만 달러에서 927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울산은 화학, 조선해양, 자동차의 3대 주력산업 분야에서 전국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수출액 기준으로는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지역내 총생산과 개인소득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울산은 잘 사는 도시가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역내 총생산과 개인소득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울산시의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산업체와 관련된 소득원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생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 그로 인한 세원이 대부분 국세로 가고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는 세금에 비해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울산의 GRDP는 5만 5천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6천만 원 정도로, 전국 평균 약 2,800만 원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울산의 1인당 개인소득은 1,916만 원, 전국 평균 1,585만 원으로 GRDP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생산은 많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소득은 그다지 높지 않은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수도인 울산은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인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인해 산업수도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력산업의 쇠퇴입니다. 석유화학 산업과 조선 산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의 영업이익이 10%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GRDP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울산은 젊은 도시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만, 지금의 울산은 결코 젊은 도시가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이 문제입니다. 1960년대 초반에서 80년대까지 울산에 많은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몰려온 젊은이들이 많이 정착했고, 지금은 그들이 함께 늙어가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전국 평균 17년인 데 반해, 울산은 12년입니다. 울산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6년으로 예측되어 전국 평균



이 9년을 앞서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울산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잠재적 갈등요인인 노사문제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노사분쟁이 오랜 기간 교섭 끝에 타결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울산이 전국 경제에서 공업생산액 14.5%, 수출액 1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울산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 크게 보아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롭게 이용하는 “이환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선6기 울산의 슬로건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이라고 정했습니다. 품격, 온기, 창조의 3박자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소통과 융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다 보니 소통이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그리고 민·관 협치로 행정이 변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봅니다. 제가 시장으로 활동하기 전에 중앙정치권에서 정책 관련 업무를 많이 담당했는데, 그 때 느꼈던 행정은 작곡가와 같았습니다. 지금 지방정부에서 느끼고 있는 행정은 지휘자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미세한 것 하나하나를 챙겨야 하기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접점을 찾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도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웃어주고 아파해 주는 것이 바로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3의 물결로 불리는 정보화 혁명에 이어 제4의 물결은 융합 혁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방행정에서도 융합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외부 조직과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서비스도 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융합을 촉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통을 위해 울산에서 실천하고 있는 노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취임식을 대신해서 '시민과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시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정했고,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진행했습니다. 반응이 좋아 분기별로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이런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는 시민들과의 소통 못지않게 직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6급 이하 직원과 함께하는 '톡톡(TalkTalk)데이'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싶어, '행복나들이'를 기획하여 뮤지컬이나 영화 등을 감상하고 나서 커피숍이나



호프에서 대화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어색한 시간이었지만, 요즘은 직원들이 불편사항이나 현안문제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직원들과 무제한 토론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평소 결재를 받으러 온 5급 이상 직원들의 의견은 자주 들을 수 있지만, 6급 이하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업무를 해온 실무자들이 저보다 전문가이기에, 그분들의 의견을 자주 들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논제가 생기면 결재를 하지 않고 관계된 주무관들까지 모두 불러 토론을 진행합니다. 제 이야기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자유롭게 의견을 듣고 듣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토론문화가 조금씩 정착되어 가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융합을 위해 울산이 주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기술과 산업의 융합입니다. 기존의 주력산업을 유지해 나가면서 좀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과 ICT기술의 융합입니다. 조선해양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십,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전력 관리를 하는 스마트그리드, 시제품 제작에 도움이 되는 3D프린팅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기존의 제조업에 서비스업을 융합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산업기술박물관, 물류와 금융이 함께 이루어지는 동북아 오일허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부해 보이지만, 저는 이것을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기에 열심히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는 故 정주영 회장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승사자이자 해결사로 불렸던 정주영 회장의 현장을 뛰어다니는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더십이 아닌가 합니다. 지방행정을 함에 있어서,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길 위의 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소통’과 ‘융합’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I. 토론〉

신현태 연합뉴스 전무이사

최근 소통이 많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소통이 어렵지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통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소통의 의미에 대해 자주 묻곤 합니다.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소통의 의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권기현 한국정책학회 회장

정책학을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따뜻함이나 공동체 상실, 품격과 같은 가치문제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문제를 복원시켜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며 잘 살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현곤 사단법인시민 운영위원장

현장 탐방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느끼신 생활 현장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궁금합니다. 들은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피드백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 수준을 어떻게 점검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들어 주니까 잘 안 되는 일도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품격 있는 도시로서의 교육과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울산의 인구를 조사해 보니, 경제활동은 울산에서 하지만 거주는 인근 도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과 문화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도시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청과 자주 협의하고 있는데, 학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문화 분야는 지금 울산의 문화적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문화 관광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제가 먼저 나서서 문화생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복지 분야, 노사 문제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노사 문제는 초창기 어려웠던 시절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디만, 여전히 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노총과 민노총,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 등을 자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느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경제 문제입니다.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음에도 실감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느끼게 된 문제라고 봅니다. 50년 전에 허허벌판에서 오늘을 이룬 것처럼 힘들지만 다시 한 번 잘 해보자는 의식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 투자 유치 등의 노력으로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완섭 충청남도 서산시장

울산과 서산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산에는 대산항 주변의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소위 대산5사라고 하는 석유화학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대산5사가 납부하는 국세는 3조 7천 억 원 정도 되는데 반해, 지방세는 300억 원 정도로 미미합니다.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크에도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미한 현실입니다. 저 역시 소통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소통을 위해 시간을 확보하고 안내하는 방법에 대한 시장님의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II. 토론〉



김성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 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광역시장으로서 노사 문제나 일자리 창출, 교육 문제에 대해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산업단지가 지역경제의 중심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방이 자율재원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은 재정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생산이 된 지역에서 일정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소득세와 법인세의 중복 과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이나 경상남도 등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오준근 경희대학교 교수

울산에서 항만 종합개발을 놓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울산 항만, 크게 보면 울산의 영역을 놓고 국가와의 소통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온전한 계획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재를 최대한 줄이고, 행사 참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시가 주최하거나 시를 대표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결정권이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투자 유치 말고는 거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지방의 행정과 교육행정이 따로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이 8:2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가 2할 정도의 권한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행정에서 재정이 관건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근래 주변 지방자치단체장님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주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항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울산 시민들의 주거지와 붙어 있는 항만이 문제입니다. 지금 석탄 부두로 사용하고 있는 항만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신항만으로 옮기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가항만이 되어 국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항만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울산 시민임에도, 시가 결재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계획권을 주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 :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교 양평군수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일시 및 장소 2015. 3. 6. (금) 양평군수 집무실
인터뷰 대상 김선교 양평군수
인터뷰 진행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석주 연구위원 군수님께서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3선의 자치단체장이 되셨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느꼈던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양평군수 공직자로서 청렴은 물론 주민과의 약속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청렴영생, 부패즉사’가 괜한 말이 아닙니다. 지난 민선 4기·5기에 약속했던 공약에 관한 실천노력과 청렴한 행정을 통한 소신 있는 행정을 하지 않았다면 민선 6기 당선은 힘들었을 겁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에게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했고 그 결과 2014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과 약속을 실천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기간 동안 민생을 아우를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것에 감동합니다. 늦은 저녁 골목에 꺼져있는 가로등을 즉시 켜주고, 아침 일찍 거리의 오물을 치워주며, 혹시 맨홀 뚜껑이라도 열려있으면 먼저 달려가 닫아 줍니다. 민생행정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부터 해야 합니다. 군수로서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조석주 연구위원 민선 6기 양평군수로서 앞으로 양평군정의 큰 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양평군수 양평에 사는 주민이 행복을 실감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월례조회나 각종 회의 시 부서장과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은 친절해야 하며 청렴해야 합니다. 친절과 청렴은 공무원으로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행정입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고 발로 뛰며 마음을 열고 주민을 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주민주도형 행정 추진입니다. 과거 하향식 관 주도형 행정에서 탈피하고 상향식 민 주도형 행정을 추진해야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넷째, 차별화된 정책 추진입니다. 도시나 다



▲ 방문보건서비스



▲ 일자리센터

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양평만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군민과의 약속이행입니다. 선거기간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행복 실감도시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양평발전을 위해서는 ‘휴먼웨어’를 중시하고 양평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군수로서 누구보다 더욱 현장위주의 행정과 많이 듣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조석주 연구위원 양평군은 작년부터 주민들 주도로 마을을 바꾸는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양평군수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식이나 행복실감 지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평군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난 2011년부터 “삶의 행복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운동은 ‘청결’과 ‘질서’, ‘예의’를 기본 덕목으로 삼아 관민 모두가 일상 생활 속에서 삶의 기본을 지키고 행복을 실감하자는 정신개혁 운동입니다. 시행 초기 반대와 불편,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주민 스스로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 지역은 깨끗해지고 사람은 친절해졌습니다.

‘삶의 행복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추진한 것이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입니다.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운동은 관(官) 주도형 자치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마을사업을 구상하여 발전시키는 민(民) 주도형 자치행정입니다.

이미 2013년에 ‘주민참여 및 지역만들기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마을 리더교육과 어르신 교육 및 다양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을 키웠습니다. 2014년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사업으로 총 30개 마을에 5억 5천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지역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양평군의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 사업은 기존에 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을 들



▲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

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눈에 띄는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했던 하향식 마인드에서 벗어나, 주민들 주도로 마을을 바꾸는 상향식 캠페인입니다. 그동안 관 주도로 진행됐던 마을발전 계획을 통해서서는 불가능했던 톡톡 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시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른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사람이 바뀌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마을주민 의식이 바뀌고 리더의 역량강화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도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의 뜻을 이해하고 많은 마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경기도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총 3개 분야 중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와 청문면 여물리 마을이 각각 문화복지, 소득체험 분야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 운동의 그동안 노력한 결과물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먼웨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플랜과 지원이 중요하며, 앞으로 3~5년 정도 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해 봅니다.

조석주 연구위원 군수님께서서는 젊은 지자체장 모임인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모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교 양평군수 지난 2004년부터 50세 이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모임으로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합해 8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지역현안으로 공부할 기회가 적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서로 모여 지역현안과 발전계획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모임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과 여건은 다르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고자 하는 바람은 똑같습니다. 각기 다른 특색으로 꾸러지는 우수한 각 지역의 정보들을 상호 교류하기 위해 1년에 3~5회 정도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년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앞장서서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에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막중한 책임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작정입니다.

조석주 연구위원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나 효율적인 조직관리 개선안 등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양평군수 이제 양평군의 인구는 10만 7천 명이 됐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시군에서는 실·과를 16개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설치기준을 타 지자체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10만 미만이라도 2개 실·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인구가 10만 이상이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양평군의 경우 16개 실·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으로 최소한 도농복합도시 지역과 동일한 기구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市)단위이면서 10만 이하인 자치단체는 경기도(과천시, 동두천시) 2개시 포함 전국적으로 11개 시(市)가 있습니다.

조석주 연구위원 최근 농촌지역에 불고 있는 '6차 산업'을 양평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경이 무엇인지요?

김선교 양평군수 이제 '6차 산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서울 가락동 시장까지 가지 않고 직거래로 팔 수 있고 오히려 소비자가 양평군으로 찾아와 소비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평군은 전국 최초의

친환경농업 특구로서 선진적인 농업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양평지방공사와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유통구조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철역을 연계한 재래시장 활성화, 농촌체험마을을 통한 연간 180만 이상의 농촌관광객, 양평군 통합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돈 버는 농업,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양평 로컬푸드 직거래장

조석주 연구위원 양평군은 용문산, 소나기 마을 등의 관광지는 물론 자연휴양림, 펜션 등 여가휴식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양평의 관광정책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양평군수 양평군은 강원도와 인접해 경유형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형 관광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이 경유형에서 숙박형 관광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농촌체험마을, 헬스투어, 스포츠 투어, 일명 '그린·헬스·스포츠 투어리즘'입니다.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실천·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평친환경농업과 농촌의 전통문화를 접목해 '농촌도 하나의 놀이요, 교육이다'라는 콘셉트로 농촌체험마을이 관내 23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2013년 180만 명, 2014년 200만 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둘째, 의·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건강회복과 유지, 증진하게 하는 관광 '양평헬스투어' 프로그램은 관내 소재한 의료시설과 천혜의 자연환경, 트래킹코스, 찜질방, 자전거길, 펜션, 관광시설 등을 활용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스포츠를 유치하여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사회 체육인들로 하여금 양평으로 와서 운동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관광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많은 관광 하드웨어에 생명력을 불어줄 핵심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린, 헬스, 스포츠 투어리즘'입니다.



▲ 손모내기 현장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의 과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도입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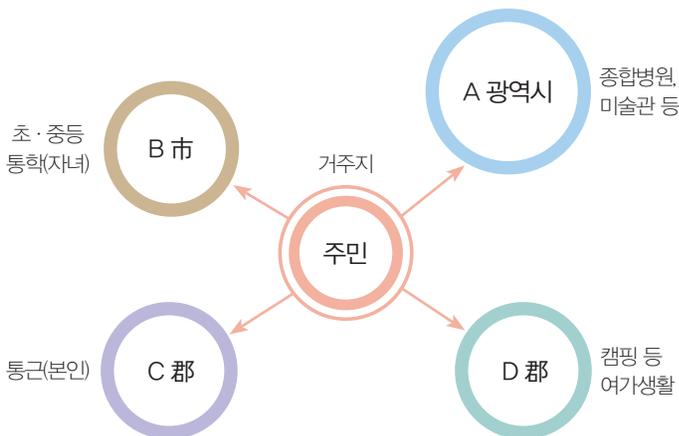
박근혜 정부는 2013년 7월 18일 지역발전정책의 정책기조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둔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그 핵심전략으로서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포함된 지자체 간 협력에 의한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의 지역발전정책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역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은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시·군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주민 일상생활 영역의 광역화에 대응한 실제 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공급,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단일 행정구역내에서는 생활서비스의 충분한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통근·통학, 서비스, 여가 등의 활동이 거주지 경계를 넘어 발생〉

공급·전달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서의 시·군 간 협력에 의한 규모의 경제 확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투자의 방지,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및 재원 부족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하며, 2~4개의 시·군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성하는 공간으로 중심도시, 농어촌 중심지(읍·면), 인근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궁극적으로 주민이 어디에 살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행복생활권 내의 지자체들이 공동의 발전목표와 전략을 선택하고, 연계·협력사업(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상생발전을 도모토록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지자체 간 활발한 협력은 지역행복생활권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과 시·군간 역할 분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의 성과와 문제

전국의 지자체들이 2014년부터 상호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63개의 지역행복생활권(중추도시권 20개, 도농연계권 14개, 농어촌권 21개, 수도권시범생활권 8개)을 구성하고, 2014년에는 35개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15년에는 42

개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2010~2013)과 이를 계승 발전시킨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2014~)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간 연계·협력 성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요성과 지자체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연계·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들 간 협업이 확대되고 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BY2C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내포문화숲길 상품 네트워크 구축·운영사업 등은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도 단계적으로 진화하여 다양한 파급효과를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2015년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화천·홍천·양구 생활권의 '분만취약지 안전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광주·나주·화순 생활권의 응급 협진 시스템, 무주·진안·장수 생활권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 당진·서산·태안 생활권의 '서해안 평생안전 체험교육센터 설치사업', 대전·옥천·계룡 생활권의 '제대군인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김천·영동·무주 생활권의 접경지역 마을 정기 방문 의료·문화 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버스 운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지자체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창의적인 협력사업들이 발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행복생활권 내 지자체간 협력이 활성화될수록 당초 기대하였던 공동자원과 수요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달성, 지자체간 유사·중복·분산 개발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 지자체간 개발경합 및 갈등 감소, 생활권 광역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인구과소지역의 재정투자 비효율성 극복, 소통·교류를 통한 지역간 화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로서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성·운영과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애로사항과 개선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지자체장과 전담부서 및 일부 참여 부서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지역발전 추진방식의 전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새로운 국비 지원사업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사업의 발굴·추진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아 인지도가 매우 낮다.

둘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큰 틀에서는 그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거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곳

도 많아서 협력기반이 약한 편이다. 민선 지자체장은 지자체 내에서의 사업실적과 예산 확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인 많은 협의와 복잡한 절차이행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협력사업보다는 단독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아직은 지자체간 협력 여건이나 공감대 형성이 불충분한 곳이 많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선도사업의 발굴·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 발굴 과정에서는 지자체 상호간 정보소통이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상이한 상태에서 각기 상이한 사업을 제안하여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여 협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중앙부처의 사업 공모기간이 짧아 그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주관 지자체 위주로 제안서 작성이 이루어져서 그 내용의 적실성이 약화되고, 사업수요·타당성·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도 주관 지자체 위주로 계획수립·집행이 이루어지고, 참여 지자체의 역할이 위축·소외되거나 아예 무임승차 하게 된다.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지자체간 충분한 검토, 협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후의 집행과정에서 변경·지연·중지되는 사례가 많다. 협력사업 집행단계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매뉴얼)이 미비하여 사업의 집행절차·방법에 대한 혼선·지체 문제와 함께 지자체간 역할 분담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동의 예산 편성·집행에 있어서 제약이 크며, 사업기간이 3년으로 짧아 동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사업도 많다. 사업의 관리·운영 단계에서는 제안서 및 계획서 작성 당시에 사업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운영비 조달 등에 대해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지자체간 갈등과 혼선·지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개선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2년째를 맞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공감대 확산과 수용력 증대, 지역행복생활권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의 개발, 추진체계 개선, 관련 예산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 차원에서의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수용력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참여 지자체 구성원의 인식 전

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논의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간 상호 협력에 의한 지역여건 분석과 대안모색을 지속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해당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문제의식, 발전목표, 주요 과제, 역할분담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통된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지역행복생활권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실행이 용이한 비예산 또는 소규모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참여 촉진 및 역량 증대를 이끌어내고, 참여 지자체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수용력 증대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협력 경험 및 성과의 공유를 바탕으로 점차 협력의 영역을 확대해 가도록 한다.

둘째,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생활권 유형별로 여건과 특성이 상이하고, 그 당면과제와 수요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역조사·분석과 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를 바탕으로 생활권 유형에 적합한 발전계획의 수립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지방과 중앙의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발전 위원회가 중앙정부 차원의 대표 창구 기능 및 부처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공, 적절한 예산의 확보, 갈등의 조정, 모니터링·평가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단위에서는 생활권협의회가 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그 기능과 권한이 모호한 상태에 있는 시·도 발전협의회 협의·조정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상황 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

넷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함께 예산지원·운용체계를 개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에 필요한 적정 예산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권 연계협력 계정 또는 지역행복생활권 단위의 공동 예산편성·집행제도 등의 도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 강성권(2015), “부·울·경 산생협력사업이 성공하려면”, 「BDI 정책포커스」, 부산발전연구원.
- 송미령·권인혜(2014),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연계협력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종열·서진완·정준호(2012),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한 지역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pp.411-429.
- 전경구·조덕호(2013),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에 있어서 지역생활권의 권역설정과 협력 거버넌스체제 구축의 정책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5권 제4호, pp.1-24.
- 지역발전위원회(2013. 7. 18),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3. 10),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 지역발전위원회(2015. 3. 1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신규 42개 선정, 지역 경제혁신의 동남풍이 분다 (보도자료)」.
- 차미숙 외(2014),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지역행복생활권의 연계·협력 촉진에 대한 제언

지역행복생활권과 연계·협력의 의의

2013년 7월 13일 지역발전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생활권정책으로 주민행복 증진이나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조건을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에 바탕을 둔 일상생활권 내에서 충족시키려는 전략이며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표방하는 박근혜정부 국정목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지역생활권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지역발전정책이 많은 투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실질적 생활문제의 해결과 직결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간의 개발연대 동안 국가는 화려한 외형적 성장을 구가했지만 그에 비해 국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데 바로 높은 자살률은 열악한 현실을, 낮은 출산율은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는 징표에 다름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환경이 변화하여 지방행정서비스 공급의 광역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소득활동, 통근·통학, 여가활동 등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확장됨으로써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가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생활권의 구성은 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의 서비스 공급체계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해 왔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상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의미가 크다. 지역생활권은 선진국의 새로운 경향인 소(하위)지역(sub-region) 단위의 권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실질적 생활의 공간을 말한다. 지역생활권정책에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행정구역별로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투자의 중복과 예산 낭비를 해소하고 생활권 단위에서 공동으로 서비스를 충족시킴으로써 특정 지역의 서비스 결핍을 보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생활권 내에서 지자체 간 공공서비스의 교차 이용, 공동 생산, 기능별 특화 등의 다양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

지역생활권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이자 핵심 성공요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생활권 내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의 활성화에 있다. 하지만 오랜 행정구역 단위의 행정집행 및 예산편성의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어 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생활권 내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책을 동원한 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정확한 평가는 시기상조이지만 그간의 추진사례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이 촉진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의 실태와 과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서부터 관심이 두어지기 시작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45개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이 공모를 통하여 선정·추진되어 왔다. 이 때의 연계협력사업은 별도의 제도적 근거나 정책의 틀에 따라 시행된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의 자발적 제안사업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협력사업을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생활권정책부터이다.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이란 생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 정부에서는 연계·협력과제와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 프로젝트)의 두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계협력과제는 통상적인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절차를 따라 사업이 선정되는 반면,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은 공모선정방식

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는 국비지원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생활권정책의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선도사업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2014년 56개 지역생활권에서 총 117개 과제가 신청되어 공모평가를 거쳐 36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총 94개 과제가 신청되어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다.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의 사례분석과 새로 시작하는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 분석 등을 토대로 볼 때,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업의 발굴·기획 과정에서 지자체의 고민과 창조성이 부족한 채 줄속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에서 주민, NGO, 전문가집단 등 광범위한 주체의 참여보다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을 구상하는 관행이 여전해서 계획수립의 마감, 협력사업의 평가, 예산 반영 등을 염두에 두고 한시적으로 사업을 발굴·기획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둘째, 짧은 기간에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 최초 제안한 특정 자치단체 주도의 기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여타 자치단체는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자치단체 간 화학적 협력이 부족한 편이다. 셋째, 지자체 간 협력과 결속력이 약한 추진체제로 인하여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어렵고 단순히 보조금의 배분에 그칠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협의회 등 결속력과 구속력이 약한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집행 단계에서 협력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넷째, 정부의 지원체계에서도 지역발전위원회의 주도성이 미약한 채 부처 간 분할적인 협력사업체계를 견지하고 있고 예산지원 등이 특정 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져 부처 간 패키지 지원이 곤란한 형편이다.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지역생활권의 가장 큰 의의는 생활권을 구성하는 지자체 간 협력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틀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분야와 시기 등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생활권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며, 오랜 자치단체 단위의 분절적 행재정 관행을 극복하고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협력사업은 연중 상시적으로 지역생활권협의회에서 어젠다 발굴, 협의·조정, 합의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화를 성사시키는 상시적 절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아

올리 협력사업의 성공에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협력사업의 경우 사업선정에서 탈락하더라도 폐기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연계후속사업을 재기획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사업의 선정 평가에서 사업의 준비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비중 있게 고려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권 내에서 지자체 간 협력의 필요성 정도가 매우 요구되는 필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보조 시 특단의 우대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협력의 촉진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재정적 이득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생활권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나 기타 국고보조금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보조율을 상향 적용함으로써 협력의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셋째, 협력사업의 유도를 위하여 네거티브 수단으로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생활권 내 각종 공공시설의 신규 공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정구역 단위의 시설 설치를 억제하고 필요한 시설을 생활권별로 공급하도록 발상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문화체육시설에 국한하여 실시하는 사전 검토 및 타당성 평가 제출을 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종합복지회관 등), 환경시설(화장장,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등)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시설의 단독 설치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생활권 협력에서 보조금 혜택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시설의 확충에만 치중하고 기존시설의 공동이용 등 비예산사업에는 소홀한 경향을 지양해야 한다. 생활권 구성의 기대효과는 생활권 내 중심지의 위계에 따라 기능이나 시설을 적의 배치함과 동시에 위계가 다른 중심지 또는 중심지와 배후지역 간 기능이나 시설의 보완적 이용을 통해 삶의 질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데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배타적 구별로 인한 서비스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생활권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의 재활용과 공동이용을 권장하고 그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들이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노하우의 전수를 위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의 추진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국내사례 선도사업 유형 및 특성

2014년 6월 지역발전위원회는 농식품부와 함께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을 기반으로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생활권 내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특화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14년 신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총 36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 간 연계협력 촉진을 통해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뒷받침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8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36개 생활권에 해당하는 선도사업은 전체 신청 규모 108건 대비 33.3%에 해당하며, 3년간 보조율 80~90%에 해당하는 국비 60억 원 이내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한 108개 신청사업은 총 11개 분야로 구성되며, 문화관광분야, 농림축산어업분야, 길조성사업, 일자리창출 분야에서의 사업이 전체의 76.85%를 차지하였다. 이중 문화관광분야는 총 45개 사업으로 중추도시, 농어촌, 도농연계가 각각 22개, 16개, 7개로 중추도시권에서 생활권 협력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사업이 개발되었다. 농림축산어업분야 21개 사업은 중추도시, 농어촌, 도농연계가 각각 8개, 10개, 3개로 농어촌생활권에서 해당 사업이 개발되었으며, 길조성 사업은 전체 9개의 사업 중 중추도시 생활권(5개)에서 사업이 주로 개발되었다.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생활권 선도사업 주요 유형은 군 경제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동설치공급 등에 대한 주민 체감형 서비스(진안·장수),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공동 설치 등에 대한 NIMBY 해소(춘천·화천·양구), 도·농 상생 DREAM 일자리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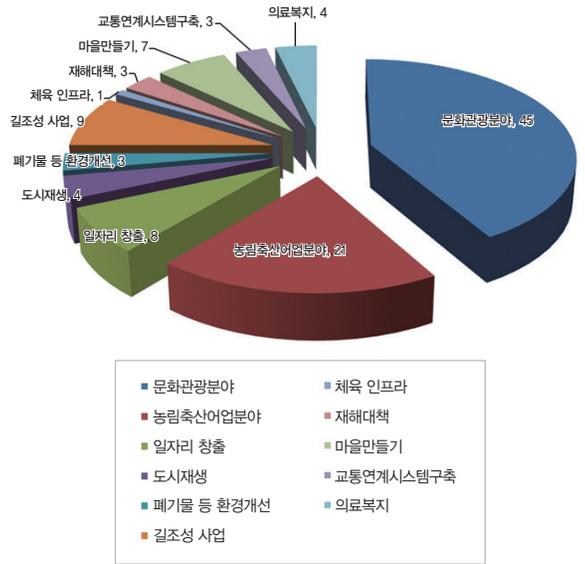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 소장/
수석연구원

〈표 1〉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지원 분야

구분	분야	개수
1	문화관광분야	45
2	농림축산어업분야	21
3	일자리 창출	8
4	도시재생	4
5	폐기물 등 환경개선 (기피시설 포함)	3
6	길조성 사업	9
7	체육 인프라	1
8	재해대책(소방 임차 포함)	3
9	마을만들기	7
10	교통연계시스템 구축	3
11	의료복지 (의료취약지 포함)	4



센터 등에 대한 일자리연계(나주·화순),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에 대한 자원 공동 활용(대전·옥천·보은·금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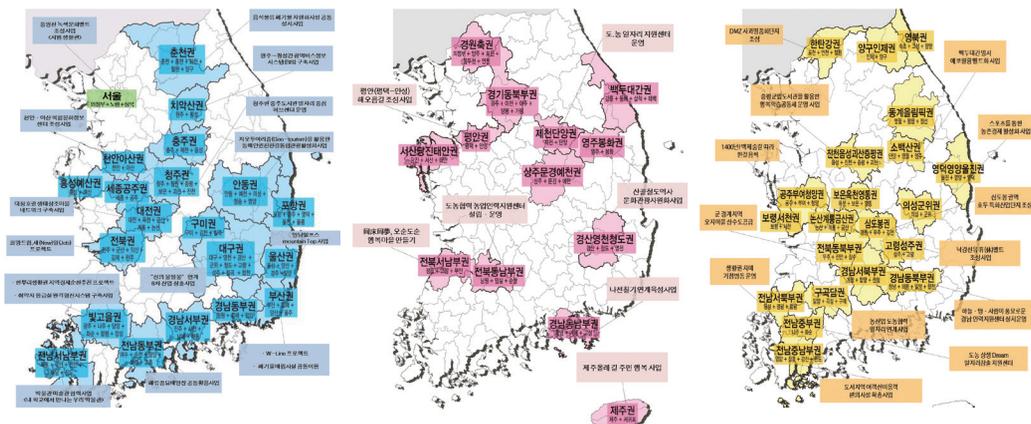
선정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주요 내용은 수혜 범위가 넓은 주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생활권 내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이용 빈도가 높으며, 수혜 범위가 넓은 의료·복지·교통 등 서비스 지원 사업이 해당되며, 대표적인 사업은 진안·장수 지역의 '군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 사업'이 있다. 또한 동 사업은 경제성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없었던 군 경계지역에 배수지 및 가압장 공동 사용, 지자체 간 배수관로 연결 등을 통해 공동 활용 상수도를 보급하여 예산 제약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2개의 자치단체가 지역자원(정수장 및 배수지)의 공동사용 및 행정구역을 초월한 상수도 배수관로 연결을 통하여 배수관로 연장단축과 가압장 공동사용으로 저예산으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낙후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상수도 최열악지역인 2개 시·군 경계 오지마을 3개리 3개 마을 89세대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권 간 협력을 통한 NIMBY 문제 해소에 대한 생활권 사업으로는 지역 간 갈등

요소인 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 시설 입지 선정 문제를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사업으로 춘천·화천·양구의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공동설치 사업'과 양산·김해의 '폐기물 매립시설 공동이용 사업'이 있다. 춘천·화천·양구의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 공동설치 사업'은 시설의 중대형화 설치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며,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수익 증가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 효과가 유발되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직접화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견인될 수 있다. 김해시 폐기물 유산매립장 공동이용확대 및 악취방지시설 보강과 관련된 양산·김해의 '폐기물 매립시설 공동이용 사업'은 악취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질 개선으로 생활환경개선 효과, 유산매립장 매립가스(LFG)이용설비 설치로 매립장최적화 운영으로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세외수입 확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주민지원 사업 시행으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가능하게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지역 간, 도·농 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농작업의 경우 계절 간 일자리 수요의 진폭이 커, 특정 시기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 도시의 유휴 인력을 농작업 구인자와 연계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나주화순 지역의 '도·농 상생 DREAM 일자리 나눔센터 사업'을 포함하여, 제천·단양, 익산

〈그림 1〉 생활권 유형별 선정 현황



중추도시 생활권(15개 사업),
시범생활권(1개 사업)

도·농 연계 생활권
(7개 사업 선정)

농어촌 생활권
(13개 사업 선정)

· 전주·군산, 거창·함양·산청 등 다양한 지역의 농촌·여성 일자리 관련 사업 총 7건이 선정되었다. 나주·화순 지역의 '도·농 상생 DREAM 일자리 나눔센터 사업'은 맞춤형 공동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인력지원 프로그램 개발, 인력수급 DB 구축, 단계별 인재육성,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농번기철 인력확보 업무대행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집중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역 농업인 영농 활동을 안정화 시켰으며, 관내 농가별 및 작업별 인건비 격차 완화로 농가경영 부담의 완화, 농작업 적기 이행에 따른 농산물 품질의 증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확대를 통해 유휴인력의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양 시·군·간의 교류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견인하였다.

생활권이 공유하는 특화 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생활권 사업은 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가 공유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유통(2차) 및 문화·체험·관광(3차) 등과 연계하는 6차산업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대청호 권역의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하는 대전·옥천·보은·금산 지역의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육성사업'을 포함한 총 16건이 선정되었다. 대전·옥천·보은·금산 지역의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육성사업'은 대청호권 마을 네트워크의 자립형 사회적기업설립을 통한 마을기업육성, 농특산물 장터 개최에 대한 유통채널 다각화, 마을환경개선, 주민교육을 통한 대청호해설사 양성 및 생태힐링 프로그램 개발, 농촌마을 전략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활성화+마을기업양성+주민의식강화 등 융복합 농촌개발모델로 정착시켜 대청호 생태마을 조성으로 낙후된 대청호 주변 마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중복투자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및 연계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테마마을 개발을 통한 충청권 협력 성공브랜드 모델이 되었다.

위 유형의 사업 외에도 지역이 공유하는 낙후된 철도 인프라를 재활용하여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영주·봉화 지역의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과 같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들이 있다. 영주·봉화 지역의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역사(驛舍)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스토리텔링 역사의 홍보사업, 해설사 교육 및 양성, 역사 환경정비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통해 백두대간 순환 협곡열차와 연계하여 수준 높은 볼거리 및 체험거리 제공으로 무공해 관광산업인 철도관광의 활용, 철도관광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포함한 2014년도 36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36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구분	사업명	생활권	주요 내용
1	증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중추도시 (시범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 노원, 성북 •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해 증광천을 녹색중심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통북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평안(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 사업	도농연계 (평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 안성 • 해오름길 코스 정비,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평택과 안성간 생활권 연계와 지역의 명소 조성 및 지역간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공동 설치 사업	중추도시 (춘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 화천, 양구 •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인근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이용
4	원주-횡성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사업	중추도시 (치악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 횡성 • 원주시와 횡성군을 경유하는 버스의 노선, 위치, 도착예정시간 등의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증대
5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추도시 (대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옥천, 보은, 금산 • 대청호권역 생태창조 업체 설립, 농특산물 마케팅 등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모델 개발 및 자생력 강화
6	중추도시생활권 일자리 중심 허브(Hub)센터 운영사업	중추도시 (청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증평, 보은 • 일자리 Hub센터 중심으로 인접 4개 시·군 Sub센터를 탄력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취업지원이 가능한 통합 지원서비스 제공
7	도서관을 활용한 행복학습공동체	농어촌 (진천음성괴산 증평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평, 청원, 진천, 괴산, 음성 • 증평군 평생학습센터(증평군립도서관)를 행복학습거점센터로 지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행복학습매니저 양성 등을 통해 참여지자체 주민의 행복학습센터로 운영
8	도·농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	도농연계 (제천단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 단양 • 농번기 농촌 인력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취업알선홍보 및 운영관리를 통해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9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중추도시 (천안아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아산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통합모델 구축과 지식정보 허브 및 천안·아산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교육문화 교류의 장 마련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 통합방제센터 및 공공도서관 운영
10	1400년! 백제숨결 따라 한걸음씩	농어촌 (공주부여청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부여, 청양 • 백제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백제관광거점 조성
11	한뿌리 생활권, 지역경제순환 증진 프로젝트	중추도시 (빛고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나주, 화순 • 로컬푸드 공동판매장 등을 통한 지역 자원 활용과 거점 지역경제 순환센터 및 마을 공동체 협력센터 설립·운영 등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거버넌스형 지역 경제활력 제고 시스템 구축
12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 사업	중추도시 (빛고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나주, 장성, 담양, 화순, 함평 • 대도시와 인근 시군의 병원 응급실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의료자문, 진료 운영으로 지역주민에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
13	'희망드림, 새(New) 일(Job) 프로젝트'	중추도시 (전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 전주, 군산 • 주얼리 산업과 섬유패션산업을 지자체 간 연계추진하여 비경제 활동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

〈표 2〉 36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구분	사업명	생활권	주요 내용
14	同床同夢,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도농연계 (전북서남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읍, 고창, 부안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조성, 농기계 공동활용센터 구축 등 접경 지역의 생활권 기반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공동 문화행사 복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 도모
15	도농협력 농업인력 지원센터 설립 운영	도농연계 (전북중남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실, 남원, 순창 농번기 부족한 농업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농업인력지원 센터 운영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도농협력의 모델 구축
16	무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농어촌 (전북동북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무주, 장수, 임실에 기설치된 정수장 및 배수장을 활용하고, 상수도 배수관로 연결 및 가압장을 공동 사용하여 4개군 경계오지 마을에 상수도공급
17	서남권 박물관 미술관 협력 사업	중추도시 (전남서남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 해남, 신안, 진도, 무안 서남권 내 위치한 박물관·미술관의 온/오프라인 협력 연계 시스템 구축하고, 권역 내 박물관·미술관 간 연합 전시회 개최
18	패류 종묘 배양장 공동활용 사업	중추도시 (전남동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성, 여수, 광양 패류(교막) 종묘배양장 공동활용을 통한 지역 간 협력증대 및 어가 소득향상 도모
19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농어촌 (구곡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양, 구례, 곡성 인근 도시지역인 광주 및 지자체 유흥인력을 활용하여 농가에게 안정적인 고용노동력을 제공
20	생활권 치매거점병동 운영	농어촌 (전남서북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 함평, 영광 장성공립노인병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인근 노인병원과 연계된 생활권 치매거점병동으로 운영
21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사업	농어촌 (전남중남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도, 장흥 섬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편리한 해상교통 체계 및 대합실 등 편의시설을 구축
22	도·농상생 DREAM 일자리 나눔 지원센터	농어촌 (전남중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주, 화순 농산업 분야에 필요한 농업 노동력을 맞춤형으로 적기에 공급하고, 도시의 유흥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계
23	철길마을에 행복을 함께 놓는 W-line 프로젝트	중추도시 (부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김해, 양산, 울주 울주-부산-양산-김해를 잇는 철도길(W-line)을 중심으로 보행로 등을 조성, 인근 마을 공동체 육성 등을 통해 철로변 쇠퇴주거지의 생활인프라 및 연계교통서비스 확충
24	폐기물매립시설 공동이용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및 수익창출사업	중추도시 (부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산, 김해 양산시 유산매립장을 김해시와 공동 활용하고 LFG(매립가스) 이용설비 설치로 매립시설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수익창출
25	“신의 물방울” 연계 6차 산업 창출사업	중추도시 (대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청도 대구(토마토와인), 청도(감와인)의 공통 자원인 ‘와인’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 연계
26	영남알프스 Mountain Top 사업	중추도시 (울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 양산, 밀양 영남알프스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홍보, 안내 체계구축과 산악휴게소 등 관광인프라 구축, 통합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생태·문화 관광거점 육성

구분	사업명	생활권	주요 내용
27	낙강선유(洛江船遊) 명품 원예단지 조성사업	농어촌 (고령성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 고령 • 성주·고령 낙동강유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원예단지 벨트를 조성하고 농산물 체험길 조성 등 사업 추진
28	스포츠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	농어촌 (의성군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성, 군위 • 지역공동의 사회인야구장 건립 및 야구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29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 관광 활성화 사업	중추도시 (포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덕, 포항, 경주, 울진, 울릉 • 지오투어리즘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으로 친환경 통합관광산업 활성화
30	산골 철도역사 문화 관광자원화사업	도농연계 (영주봉화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 봉화 • 백두대간 순환 협곡열차와 연계하여 역사(驛舍) 스토리텔링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수준 높은 볼거리 및 체험거리 제공
31	하늘·땅·사람이 풍요로운 경남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	농어촌 (경남서북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 함양, 산청 • 농촌인력 중개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인력난 해소 농업생산성 유지, 3개군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32	나전칠기 연계 육성사업	도농연계 (경남동남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영, 고성 • 나전칠기 제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지역특화 전통사업 발전도모
33	제주 올레길 주민 행복 사업	도농연계 (제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서귀포 • 올레길 관광자원 재활용 및 개선, 마을별 길러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주민소득 증대 및 6차 산업 생태계 조성
34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 사업	농어촌 (소백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월, 단양, 영주 • 백두대간 영서 산악자원과 남한강 수변자원을 연계한 에코힐링 벨트 추진
35	삼도봉 권역 호두 특화 산업단지 조성	농어촌 (삼도봉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천, 영동, 무주 • 삼도봉의 주요 생산물인 호두를 공동 브랜드화하고 공동 연구개발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36	DMZ사과 명품화 단지조성	농어촌 (한탄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천, 철원, 연천 • 철원과 인접한 생활권을 가진 연천·포천시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브랜드 통합과 규모화로 사과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해외사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신산업화 : 유럽의 ‘외레순’ 지역



오은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지역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공간적 범위와 대상은 다소 상이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지원을 위하여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과 산업 분야에서의 경제협력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과 덴마크 국경 지역에 위치한 ‘외레순’ 지역의 협력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간 산업경제 부문의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외레순 지역(Øresund Region)은 스웨덴과 덴마크 간 국경에 위치한 지역으로, 스웨덴 남부의 스키프(Skåne)지역과 덴마크 동부의 셸란드(Sjælland), 로랄드 팔스터(Lolland-Falster), 피엔(Moen), 보른홀름(Bornholm)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는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이 강한 지역이었지만 아시아 국가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지역이다. 경제 위기에 대처한 결과, 외레순 지역은 현재는 식품-바이오, 의료, IT, 환경 분야 등에서 첨단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유럽 내 핵심적인 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외레순 지역은 1400년대에서 1800년대 사이에 스웨덴과 덴마크 간의 전쟁이 11번이나 발생했을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역 내 민족 감정이 남아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중공업의 경쟁력 상실과 경제성장 및 일자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스웨덴-덴마크 양국 경제의 26%를 차지하는 이 지역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73년 두 접경

지역의 물리적 통합에 이르는 전면적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취지의 협정이 체결되고 1975년에 외레순 대교의 건설이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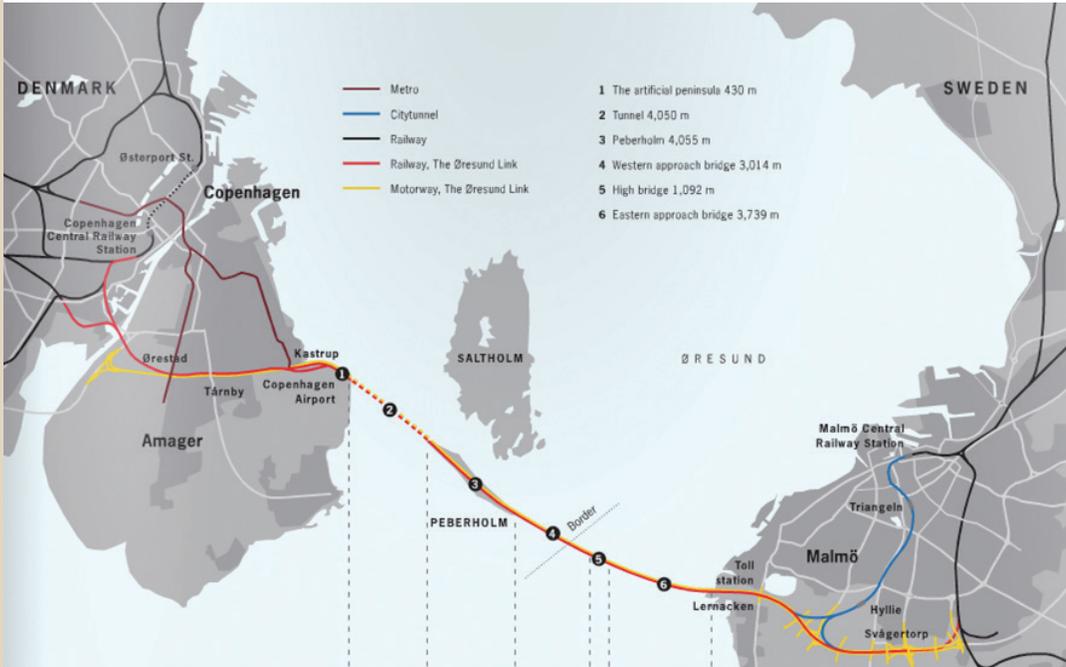
오일쇼크의 여파로 외레순 대교 건설은 1991년에 재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합하는 형태로 외레순 대교를 건설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특히 이 때 스웨덴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간 협력을 추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의 문제가 스웨덴 지역에서 더욱 심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말뚝의 서쪽 항구 매립지 대신 베스트라함넨에는 대형 조선소와 사브(SABB) 자동차 회사가 있었으나 1990년대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았고, 2002년 도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대형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은 울산 현대중공업에 분리되어 매각되었다.

한편으로 덴마크에서도 새로운 광역적 생활권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이 인구의 증가와 비싼 물가로 인해 좀 더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레순 대교를 포함하여 지역 간 협력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스톡홀름, 오슬로, 헬싱키보다 훨씬 크고 3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적 지역을 조성하고, 지역통합을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계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여러 협력 사업 중에서 기본적인 인프라 사업인 외레순 대교는 2000년 완료되면서 이 지역은 하나의 통합적인 경제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외레순 대교의 개통으로 두 지역 간 교통이 수월해짐으로써 코펜하겐 국제공항은 유럽 5위의 대형공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코펜하겐 공항은 코펜하겐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외레순 대교가 연결되면서 외레순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스웨덴 승객이 더 쉽게 코펜하겐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코펜하겐 공항은 국제 허브공항으로 위상을 자리잡을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스웨덴 스코네 지역의 비즈니스 입지 매력도가 향상될 수 있었다.

외레순 지역 내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기구로 1992년에 외레순 위원회(Öresund Committee)가 설립되었다. 외레순 위원회는 스웨덴, 덴마크에서 각각 18명씩 총 36명의 민선 정치인을 위원으로 하며, 사업 및 무역, 노동시장 및 교육, 통신 및 사회간접자본 구축, 문화, 환경,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다채로운 지역 간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역 내부적으로는 개인, 기업, 기관 간 협력 관계 증진과 이들 간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위한 플랫폼 형성에 주력하고 있고 있다. 한편, 지역 외부적으로는 위원회



출처 : <http://uk.oresundsbron.com/page/1087>

〈그림 1〉 외레순 지역의 위치와 외레순 대교 현황

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각국 정부와 EU 본부에 대변하고 이들에게 로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역 간 경제협력에서 대학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지역 간 협력을 위하여 외레순 대학(Öresund University)이 연구기능과 기업 간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레순 대학은 외레순 지역 주변의 덴마크와 스웨덴 대학들이 1997년에 창설한 자발적 대학연합체이다. 이 대학연합체는 지역 내 12개의 대학, 15만 명의 학생, 1만 2천 명의 연구인력, 6천 5백 명의 박사과정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공동 운영을 통하여 전문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레순 대학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목표로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IT와 BT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레순의 대표적 과학단지 중 하나인 이데온(Ideon)에는 270개 기업이 입주하여 있는데, 그 중 10개 기업이 학생창업을 통해 설립된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창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교수, 연구자, 기업인이 만나는 만남의 장을 대

학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레순 대학은 메디콘 밸리 아카데미(Medicon Valley Academy), IT외레순, 외레순 푸드네트워크 등을 설립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과 통합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OECD, 2010).

메디콘밸리는 600여 개의 기업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생명공학 클러스터로, 메디콘밸리의 역사는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외레순 대교의 개통과 함께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1997년 메디콘밸리로 명명되었다. 메디콘밸리 프로젝트는 전술한 외레순 위원회가 구상하고 최종 결정한 사업으로, 위원회는 제약산업, 병원 및 지역조직의 대표들과 협의를 통하여 생의학, 바이오기술, 보건 및 제약산업의 중심지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외레순 대학은 메디콘밸리와 관련된 행위자들 간 협력 활동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1997년 4월 메디콘밸리 아카데미를 창설하였다. 메디콘밸리 아카데미는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대정부기관 공동로비, 연구소-병원-기업 간의 연계 발전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0년 4월 정규회원이 직접 재정지원을 수행하는 연합체의 형태로 변하여 자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출처: <http://www.contentgalle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

〈그림 2〉 스웨덴 말뫼에 위치한 인베스트 스코네의 내부 전경

외레순 푸드네트워크의 경우 식품업체들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EU의 지역 간 협력프로그램의 재정 지원과 대학-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논문 프로젝트’는 실제 박사학위 연구자들이 산업체종사자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초기술뿐만 아니라 응용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식품산업 기술교육과정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분야의 연구주제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지역 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위원회와 대학 이외에 인베스트 스코네(Invest Skane)와 같은 투자청(스웨덴 말뫼·룬드 대상)들은 컨퍼런스 개최와 세계기업과의 교류를 주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레순 지역의 협력이 성공함에 따라, 스톡홀름으로 집중되던 스웨덴 인구가 스코네 지역으로 재유입되면서 인구집중의 문제가 완화되고 지방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에는 일차적으로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양 지역이 심도깊게 논의하는 장으로서 외레순 위원회가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는 지역의 비전과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지역 내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네트워크화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디콘밸리 아카데미 사례처럼, 위원회는 대학 연구소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외레순 대학을 매개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태연, 이철우, 이종호(2009) “외레순 식품클러스터의 산학관 협력체계와 지원기관의 역할 연구”, 식품유통연구 26(4)
- 김현태(2014), “발트해 신지역주의 연구 : 초국가도시네트워크와 월경지역협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OECD(2010), 『OECD Territorial Reviews: Trans-border Urban Co-operation in the Pan Yellow Sea Region, 2009 (Korean version)』, OECD Publishing
- 메디콘밸리, <http://www.mediconvalley.com>
- 외레순 대교, <http://uk.oresundsbron.com/page/1087>

자이언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명품 도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면적의 무려 71.4%(756km²)를 차지하고 있는 울주군은 전국의 군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214,629명, 2015년 1월 기준)와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진 성장도시다. 울주군은 “해 오름의 고장”으로 동해안 간절곶에서는 동북아시아 가운데 가장 먼저 새해 첫 해가 뜨고, 가지산과 신불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고봉준령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세계 5개밖에 없는 알프스라는 지명의 “영남 알프스”라 불려질 만큼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축복받은 지역이다.

▼ 신불산 갈대



새해 아침을 가장 먼저 여는 곳, 간절곶

한반도에서 새해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은 해맞이 장소로 유명하다. 새하얀 등대와 아름다운 조각상, 거대한 소망우체통, 울주 특산물과 공예품 등 간절곶에는 바다를 비롯해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다. 이곳에서는 영일만의 호미곶보다 1분, 정동진보다 5분 일찍 해가 뜬다. 인근에는 세계 최대 크기의 '소망우체통'이 있어 엽서 등을 넣으면 실제로 배달이 된다.

간절곶에서는 새해 첫날 가장 이르게 뜨는 해를 기려 매년 해맞이 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는 12월 31일 전야 행사로 시작되며 재야에는 신년 메시지 보내기와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다음날인 1월 1일에는 해가 뜨기 전부터 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모듬북 공연을 펼친다. 장쾌한 북소리와 함께 새해 일출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해를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빈다. 이밖에도 한지에 새해 소망을 적어 새끼줄에 엮기·투호놀이·제기차기·널뛰기·그네타기의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영남 알프스, 가지산과 신불산

울주군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1,000m 높이의 산들은 유럽 알프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하여 '영남 알프스'로 불리며, 계절마다 새로운 얼굴로 등산객을 반긴



▲ 간절곶 일출



▲ 간절곶 해맞이 축제



▲ 가지산 봄



▲ 가지산 여름

다. 봄이면 철쭉을 비롯한 갖가지 꽃들, 여름에는 맑은 계곡, 가을에는 황금빛 억새, 겨울에는 눈꽃이 장관이다. 특히 가지산은 울산의 산 중 최고봉(1,241m)이며, 태화강의 발원지로서 우리나라의 산 중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고, 사계절 모두 비경을 연출한다.

또한 신불산은 울주군 군립공원으로서 예로부터 신성한 산으로 불린다. 신불산 정상에서 영축산으로 이어지는 4km 구간 능선 수백만 평의 억새평원이 펼쳐져 있다. 국내 억새평원 중에서도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이곳의 억새는 억새들 사이에 잡풀이 거의 없어 가을 내내 풍요로운 황금빛 물결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희귀 동·식물 서식 습지보호구역도 찾아 볼 수 있어 생명과 교감할 수 있다.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와 국보 제14호 천전리 각석

울주의 산과 들에는 우리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적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국보에 해당하는 대곡리의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와 천전리 각석(국보 제147호)이다.

반구대는 마치 거북 한 마리가 납죽 엎드린 형상을 하고 있어 이름 붙여졌으며, 선사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상생활을 바위에 새겨 넣은 그림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태화강의 한 지류인 대곡천의 너비 10m 높이 3m 바위에 새겨진 그림으로 신석기시대부터 여러 시기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래, 물개,



▲ 반구대 암각화



▲ 천전리 각석

거북 등의 바다 동물과 사슴, 호랑이, 멧돼지, 개 등의 육지 동물, 사람 그림 등을 볼 수 있으며,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을 보면 선사시대 당시 사람들이 활발하게 사냥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전리에 위치한 바위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과 인간,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상부의 마름모꼴무늬, 굽은무늬, 둥근무늬, 우렁무늬, 사슴, 뱀, 사람 얼굴상 등)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신석기시대에서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당시의 풍요 의식과 관련된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한 하부의 기마행렬, 배의 항해 모습, 용, 말, 사슴 그림, 300여 자의 명문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사람들이 남긴 것으로 신라 사람들이 삼국시대 이래 이곳을 성지로 여겼음을 짐작하게 한다.

전국 최대의 옹기집적촌, 외고산 옹기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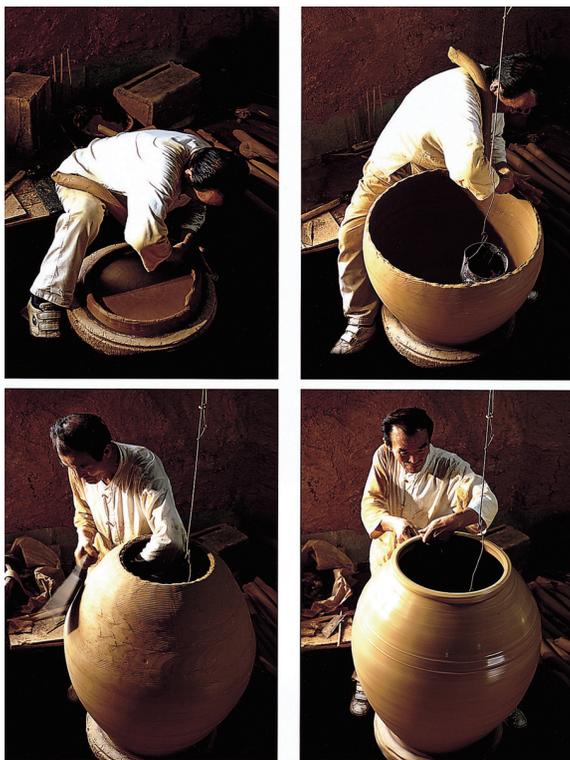
몸으로 쌓은 경험은 오래 기억된다. 전국 최대의 옹기집적촌인 외고산 옹기마을에서는 내손으로 직접 전통 옹기를 빚을 수 있다. 직접 흙을 만지고, 그릇 모양을 빚는 활동은 아이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 좋다.

옹기는 우리가 쓰는 그릇 중에서 자연에 가장 가까운 그릇이다. 야산에서 얻은 찰흙에 부엽토와 재를 섞어 만든 찻물에 입혀 구워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서민층에서는 생활용품에서부터 의료용품, 약

기 등 다양한 용도로 용기를 사용해 왔으며, 특히 외고산 용기는 장작으로 불을 때는 가마에서 굽기 때문에 재질이 우수하고 독성이 없다.

2009년 11월 준공된 용기문화관은 2013년에 울산용기박물관으로 승격되어 용기 제작 도구를 비롯해 용기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기 쉬운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울산용기박물관에는 2010년 9월 29일 외고산용기협회에서 제작에 성공한 높이 2.2m, 둘레 5.2m, 무게 172kg의 세계 최대 용기도 전시되어 있다.

울주군에서는 용기를 테마로 용기축제도 열리고 있다. 울산용기축제는 용기 장인들이 용기 빚는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울주군의 대표적인 축제다. 매년 5월 개최되는 축제에서는 나만의 용기 만들기, 용기종기 가마구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세계 토기 전시회, 희귀한 용기 전시회, 용기마을 역사관, 용기 사진전 등의 전시를 둘러볼 수 있다.



▲ 용기 제작 시연



▲ 용기 장수 행렬



▲ 용기 축제 체험장

전국 최초 먹거리 특구에서 개최되는 입이 즐거운 축제

우리나라 최초의 먹거리 특구인 언양-봉계불고기 단지를 비롯,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명품 언양미나리, 세계로 수출되는 울주배와 단감,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각종 유기농 쌀 등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하고 있다.

언양-봉계 지역의 한우는 그 맛이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하였다. 언양과 봉계에 서는 두 지역이 번갈아가며 10월에 우수한 한우 맛을 알리는 '한우 불고기 축제'를 개최한다. 대형 텐트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직접 최고 품질의 한우 불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한다. 생고기를 그대로 참숯불에 얹어 왕소금을 뿌려 먹는 맛이 일품이다. 이밖에도 한우 목장 체험, 농기구 및 대장간 체험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대규모 꽃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먹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이 더해 한껏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 불고기 축제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울주군

국가공단인 온산공단과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울주군은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서울 면적의 1.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에 1차 산업에서부터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분야를 두루 갖추고 있다. 2010년에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이 개통됨으로써 교통·물류의 중심지, 동남권 개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역동적이면서 희망이 넘치는 울주군은 산업중심 도시, 교육도시, 친환경도시 등 가장 살기 좋고 머무르고 싶은 모범적인 도·농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정리: 박진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수석연구원)

**제4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일 시 2015년 2월 26일(목) 9:30~10:30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제 Smart Work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 가능성 검토
발 표 이병기 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4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이병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Smart Work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 가능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3차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2015년 2월 26일(목) ~2월 27일(금)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2월 26일 목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3차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도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 행정자치부 정책연구과제 착수 및 최종보고, 수탁용역연구과제 중간보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제 17회
지방자치실천포럼
개최**

일시 2015년 2월 25일(수) 7:00~9: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에서 '제17회 지방자치실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이 '소통과 융합의 지방자치'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제5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일시 2015년 3월 12일(목) 9:30~10:25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제 지방자치단체 대상 신용평가제도 도입
발표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5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이 '지방자치단체 대상 신용평가제도 도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간물

「지방자치 Focus」 제92호 발간

제 목 2015년도 지방재정 정책의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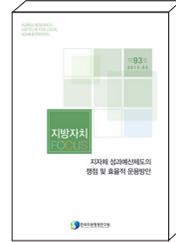
저 자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방자치 Focus」 제93호 발간

제 목 지자체 성과예산제도의 쟁점 및 효율적 운용방안

저 자 이효(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KRILA 교육연수 [담당자: 김유숙 02-3488-7353]

상반기 교육일정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일정
창조와 소통의 정부3.0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2. 25(수) ~ 2. 27(금)
		제2기 4. 8(수) ~ 4. 10(금)
		제3기 5. 20(수) ~ 5. 22(금)
지방규제개혁	3일(비합숙) (19시간)	제1기 4. 1(수) ~ 4. 3(금)
		제2기 5. 6(수) ~ 5. 8(금)
		제3기 6. 17(수) ~ 6. 19(금)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3. 4(수) ~ 3. 6(금)
		제2기 4. 15(수) ~ 4. 17(금)
		제3기 5. 27(수) ~ 5. 29(금)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4. 22(수) ~ 4. 24(금)
		제2기 6. 10(수) ~ 6. 12(금)
주민행복 마을만들기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3. 25(수) ~ 3. 27(금)
		제2기 4. 29(수) ~ 5. 1(금)
		제3기 6. 3(수) ~ 6. 5(금)
내부통제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5. 13(수) ~ 5. 15(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실천포럼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el. 02-3488-7361 / yitak@krila@re.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Issue
복지재정

02

지방자치실천포럼

공무원연금개혁의
쟁점과 방향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특별대담

신도청시대 개막으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경상북도

: 김관용 경북도지사